

# 시법연수원 파병관련 자료집 양 견해 모두 있음 2003년 11월 출처 국민행동. (34기 주최 예비법조인 이라크파병어떻게 볼것인가?)

##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헌법 · 국제법적 고찰 및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이익

이승환(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김태우(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1. 들어가며

2003. 4. 2. 국회는 정부의 공병과 의료부대에 한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지원단만을 파병하자는 수정안을 부결되었는데, 정부는 이로써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문제를 유보하고,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및 파병시기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추후 결정한 후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지금 동맹국인 미국이 전투병을 비롯한 추가 파병요청을 해오자 국내에서 다시 파병자체에 대한 반대론과 전투병파병절대 불가론이 비등하면서, 추가에 따른 파병에 관한 국회동의 절차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위헌론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도 파병군대의 성격을 비전투병파병으로 한정하고 병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발표되고 있다.

#### 2. 이라크 파병의 국내법적인 고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면서 파병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근거는 이라크 전쟁이 헌법 제5조에서 부인하고 있는 “침략전쟁”이라는 것이다.

비록 국회가 정부의 1차 파병안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이므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침략전쟁을 승인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며, 기존의 파병부대의 확대는 물론 특히 전투병 파병은 침략전쟁에 협조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병이 아닌 공병·의료 부대의 파병은 관련된 국내법적 차원에서 이미 정부의 발의 와 국회의 동의등 절차가 종료된 헌법기관의 행위라 파병자체의 실체성에 관한 위헌성의 문제는 거론될 수 없고, 다만 부대의 확대파병에 따른 추가동의라는 절차적인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결국은 공병·의료부대의 확대파병이던지, 전투병의 파병이던지간에 이와 관련된 위헌성의 문제는 이라크전쟁자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침략적 전쟁”임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비로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 3. 이라크 전쟁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침략적 전쟁”인가!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된 “정당하지 못한 전쟁”론의 제일의 근거는 UN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비판은 UN이 종전후인 2003. 10.경 UN결의 1511호로써 현실적으로 이라크 영토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영국군을 “연합임시당국”으로 인정하고 이 “당국”이 이라크 임시과도 통치위가 제헌헌법을 만들어 새 이라크 정부를 구성하면 이라크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이라크인에게 반환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영군에 대한 국제법적인 합성성을 부여 하였으며, “ UN회원국들에게 연합군에 대한 병력지원(파병)을 하여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에 기여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대한 미·영의 이라크 공격에 침략전쟁이라는 비판의 소지를 국제법적으로 면제하였고, UN회원국의 파병에 대한 국제법적인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물론 위의 UN결의 1511호가 국제법학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와 전쟁에 있어 국제법이라는 것을 국내법의 경우처럼 그 해석이 항상 명료하고 집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나 이해당자국 간에 다툼이 있어 왔고, 실제로 UN 창립이후 다국적군에게 명백하게(법률학적으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한 결의한 예는 한국전쟁과 남로리지아전쟁의 두차례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위 UN결의안에 대한 해석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파병 동의를 위헌이라 던지, 그 전제되는 사실로서의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라는 논리는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성립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파병에 대한 반대나, 비전투병파병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은 국내·국제법적인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각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의 득실에 관한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또한 UN기타 국제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 및 민주주의 태리의 근절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관한 방법론에 관한 다툼의 문제이며,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안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의 사활과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이익을 담보로 하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 4.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정당성 논쟁의 함정

이라크 전쟁이전의 후세인정권은 소위 “국제법상의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1991년의 걸프전 당시에는 UN이 후세인 정권의 쿠웨이트 침공을 침략행위로 선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당시에는 2003.의 이라크 전쟁때와는 달리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미국의 주도권 행사에 사사건건 반대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이라크 전쟁과는 달리 이라크의 선제공격(쿠웨이트에 대항)이 있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쿠웨이트에서 후세인군을 격퇴함에 있어 프랑스

나 독일의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1차 걸프전 이후 후세인정부는 UN에 의하여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제거 제재를 받았고, 특히 미사일 유도체개발 및 생화학 무기등의 개발등에 관하여 엄중한 사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부인하거나 은폐하였고 급기야 9.11테러 이후 국제테러의 배후지원세력의 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

후세인정권은 이라크 전쟁직전까지 국제적으로 "집행유예"의 상태에 있었고, 후세인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쿠르드 족 및 시어파 회교도에 대한 대량학살등)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을 가릴 것 없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에 관하여는 시종 미국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후세인 정권이 서방의 무력으로 진압되어 이라크 민중에게 자유와 민족주의 및 번영을 안겨다 주어야 하는 대명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아니라, 이라크 문제의 주도권에 대한 패권다툼적인 성격인 것이다.

또한 개전 직전부터 유럽을 뜨겁게 달구었던 반전여론의 밑바탕은 이라크 전쟁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보다는 반유대주의 정신의 표출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상의 합법성의 문제나 정당성의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미국에 반대하는 서구의 반전이론에 우리가 큰 비중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선부른 낭만적인 인도주의적 발상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이 영향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라크의 추가파병과 관련된 국내에서의 반전여론은 이같은 국제문제에 있어 서로의 출발점을 달리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당성 논쟁의 함정에 쉽게 빠져서는 아니된다.

##### 5.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 도덕논쟁에 함몰되어서는 곤란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므

로 가담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카스피해를 잇는 전략벨트를 확보함으로써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지역세력들의 발호에 썩기를 박음으로써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Pax Americana)를 정착시키려는 워싱턴의 시도는 다분히 패권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무조건 저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다. 로마나 영국이 그랬듯 패권적 힘을 보유한 나라는 하나같이 그 힘을 바탕으로 패권적 질서를 구축하려 했으며, 소련 붕괴 및 탈냉전 이후 유일 초강국으로 등장한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는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 역시 일정부분 여기에 순응하면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오랫동안 맹방관계를 맺어온 나라가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독재와 개인 우상화를 자행해온 후세인 정권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경우가 이렇진대, 천편일률적인 도적논쟁에 함몰되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자세는 타당하지 않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통해 안보 및 경제적 번영을 꾀해야 하는 한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거대한 도덕세력인양 행동할 수는 없다.

테러공격으로 인한 파견장병의 희생 가능성은 당연한 우려이나, 엄청난 인명희생이 불가피했던 베트남 전쟁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주둔하게 될 이라크를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하여 2만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과 비교하는 것은 한 마디로 무리이다.

파병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파병 예정지인 모슬 지역이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미리부터 위험을 과소 평가하는 것도 국민에 대해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한국군이 테러의 표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군대란 국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조직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위험을 이유로 파병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한-이슬람간의 관계 악화 여부는 상당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서회·제마 부대가 열심히 대민지원을 한 결과

이라크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이 파견되는 부대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자위를 위한 교전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희생적인 대민봉사에 힘쓰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치안유지에 임한다면 매우 우호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이라크 정상화 이후 오히려 한-이라크간경제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으며,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6. 국익 극대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상처난 양국관계를 치유하는 것은 과병이 가져올 최대의 국익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이후 뼈적거리기 시작했고,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었다. 북한을 '민족적 화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포용정책이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한미동맹의 기본원칙과 상충성을 보이면서 동맹의 존재이유는 희석되었으며, 반미정서가 확산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 전쟁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행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세계전략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지나치게 엉거주춤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밝히고 감축설을 흘리는 것은 그 동안 진행된 한미동맹의 이완이나 미국내 반한정서의 확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한미간 대외정책의 원칙과 목표가 상이하고 동맹관계도 예전같지 못하지만, 한국안보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국의 중대한 안보문제로 부상할 때 우선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은 결국 미국의 핵우산과 방위공약이며, 한미동맹이 확고하고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할 때 6자회담 등 진행 중인 다자대화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입지도 넓어진다.

해방후 반세기를 넘긴 이 시점에서 한국 안보적·외교적·경제적 위상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당연한 일이나,

이것이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한국이 경제적·기술적 선진화를 이루고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한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나, 그때까지 미국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다. 그런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한국의 파병은 불가피하다.

## 7. 이제부터는 국론결집에 나서야

추가파병이 정식으로 결정된 이상, 한국사회도 이제부터는 소모적 찬반논쟁보다는 반대급부를 최대화하기 위한 국론결집에 나서야 옳다. 비록 한국정부가 공개적으로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보류하고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나 북핵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힘과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은 최상위 국익이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과는 무관하게 파병을 통해 한-이슬람 관계를 오히려 증진시키고 향후 중동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만의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제부터의 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탱크나 장거리 대구경 화포 같은 중화기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무장이 필요한가, 이라크인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어떤 대민봉사 활동을 벌일 것인가, 파견장병의 안전을 위해 어떤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등 지금부터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세부사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은가.

이러한 때에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파병결정 자체에 대해 과격한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논의는 이미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따지고 보면, 정부는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살폈다. 중요한 국가정책이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면서 입안되고 수행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치밀한 국익계산을 요하

는 사안을 막연히 국민대중의 여론에 내맡기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이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방안을 놓고 승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치밀한 국익계산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방향을 결정한 후 다소의 반대가 있더라도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안도 많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보다 당당한 자세로 국론결집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 이라크 추가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정대연 (전국민중연대정책위원장, 파병반대국민행동기획단장)

### 1. 이라크 추가 파병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파병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 명분없는 전쟁-파병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 부시정부는 이라크 침공 명분으로 내세웠던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알카에다 연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관련 정보를 왜곡 조작하였다는 증거만 밝혀지고 있음.
- 이라크 추가 파병이 명분이 없다는 점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80퍼센트 안팎의 국민이 이라크 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파병론자들도 명분이 없다는 점은 대개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었는가?
-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침략이 정당화된다면 근대화를 명분으로 한 일체의 침략도 정당화될 것임.
-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라크인 사상자는 6,000명에 달하며, 상하수도, 전력망 등 국가기간망의 파괴로 인한 질병과 기아의 고통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군의 강압적인 점령정책, 무차별적인 발포 등에 따른 이라크인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라크인들의 대다수는 “후세인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함. 갈수록 격화되는 이라크



인들의 저항은 미군 점령이 이라크의 평화와 치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음.

## 2. '유엔결의안' 전쟁과 파병의 정당성을 보증하는가?

○ 유엔결의안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합법화 해준 것이 아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스페인에 의해 발의된 다국적군 파견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은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략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행위였음을 추인해주는 결의안이 아니라 전쟁 이후, 이라크 국민들에게 주권을 넘기는 과정에 대한 결의문이고 정치적 권한 이행과정에 필요한 "치안유지"에 대한 결의문일 뿐임.

○ 다국적군은 점령군의 연장, 평화유지군과 다르다.

- 평화유지군의 주요임무는 분쟁지역의 중간에 들어가, 질서를 유지하고 협정위반 등 분쟁 현장을 감시하는 등 현상유지가 주요 임무이고, 자위권을 제외하고는 강제군사조치를 할 수 없음.

- 비용도 UN이 부담하며, 파견 시에는 접수국인 이라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한국은 소말리아에 UN의 공식 요청을 받고 UN의 부담 하에 비전투병인 PKO를 파견한 바 있음.)

- 이번 유엔결의안은 점령군으로서의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전혀 담지 못했고, 미국이 이라크로 주권을 이양하는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며, '더러운 전쟁'의 대가로 치르고 있는 미국의 인적, 물적 비용을 다른 나라들에게 떠넘기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을 뿐임.

○ 유엔결의안, 강대국들의 야합의 산물이다.

주요 반전(反戰) 국가였던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결의안 통과 직후 파병이나 전비 부담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파월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 독일, 프랑스로부터 이라크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고 밝혀, '반전 3국'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미국은 이들에게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한국 등 여타국가들에게만 파병 및 재정 지원을 압박하기로 물밑 야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유엔결의안 통과 직후 파키스탄이 미군주도의 다국적군의 성격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파병불가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유엔결의안의 문제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임.

## 3. 갈수록 격화되는 이라크와 아랍인들의 저항, 정녕 그 곳에 뛰어들려 하는가?

-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든 이라크 게릴라 전
  - 10월 27일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테러로 47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하는 등 자살폭탄테러가 잇따라 일어난 데 이어, 28일에는 미점령군의 상징으로 돼 있는 에이브람스 탱크가 파괴되고 11월 2일에는 미군 치누크 헬기가 전착식 미사일에 격추돼 15명이 죽고 20여명이 부상하는 등 게릴라전이 더욱 조직화 정교화하고 있다.
- 이라크에 안전한 곳은 없다.
  - 이러한 게릴라전은 바그다드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서쪽 팔루자, 북부 모술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호텔과 유엔사무소 적십자사 건물 등 유엔관련시설 까지 집중타격으로 되고 있다. 유력한 한국군 파병 후보지역으로 알려진 북부 모술에선 1일 오전 7시 30분께 한 도로에서 지뢰가 폭발해 민간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미 제101 공중강습사단 소속 미군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티크리트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역의 송유관 한곳에서 불이 났다. 최근 미군이나 미군 협력자들에 대한 공격은 하루 평균 3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전아랍민중의 저항으로 확산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사 수천명이 이라크에서 미군 점령에 맞선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고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런던에 망명한 사우디 정치운동가 무하마드 알 마사리 박사의 말을 따 28일 보도했다. 알 마사리 박사는 “약 5천명의 사우디 출신 무자헤딘 전사들이 바그다드에 있으며, 다른 이슬람 국가와 아랍권의 많은 전사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고 말했다.
- 한국에 대한 위협 본격화되고 있다.
  - 오사마 빈 라덴이 지난 18일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를 통해 방영된 메시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참가하는 어떤 세력도 공격을 받을 것” 이라고 경고한 이후 최근 한국대사관 직원이 납치되어 ‘이라크를 떠나라’는 경고를 받는 등 한국에 대한 적 대감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 미국의 강경정책은 더 큰 저항 불러 볼 것이다.
  -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NBC 방송과 ABC 방송, 폭스 TV 등의 시사 대담프로에 잇달아 출연해 “이라크의 혼란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해 승리할 것” 이라고 말함으로써 저항세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군이 압력을 가할수록 반군의 공격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미군은 지난달 31일 바그다드 서부 아부그라이브에서 이라크인들의 반미시위를 탱크로 진압, 14명의 민간인을 사살했다.

#### 4. 한국의 '나홀로 파병'

- 터키의 파병이 불투명해진 데 이어 파병결정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이라크에 기술·의료지원 병력 443명을 파병 중인 타이의 상원의원들은 28일 이라크에서 타이군 병력의 즉각 철수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120명의 경찰을 파견 중인 포르투갈은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지원 결의안 통과 이후 제한된 숫자의 전투병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치안 악화로 이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5천명 가량의 파병을 검토해 온 방글라데시도 최근 사태로 파병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행정부가 파병 동의안 자체를 의회에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밖에 중국, 벨기에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파병거부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 5. 국민을 속인 정부의 파병결정, 이래도 되는 것인가?

- 파병을 선동하는 관료들 미국의 관료인가? 대한민국의 관료인가?  
한승주 주미대사,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조영길국방부 장관과 나종일, 반기문, 김희상 등 외교안보 수석으로 이어지는 정부내 외교, 국방라인은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공식적인 파병결정이 있기 전부터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 해왔다.
- 오래가지 못한 1차조사단의 거짓말  
국방부 등 파병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1차 합동조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군의 안내를 받고, 미군이 제공한 정보자료에 근거하여 한국군 파병예정지로 알려진 모술지역을 불과 45분에 걸쳐 미군이 제공한 헬기와 짐차를 타고 둘러본 후 “이라크 치안은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다.”는 오래가지 못할 거짓말을 했다.
- 노무현대통령의 국민기만  
지난 18일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하는 NSC에서 이라크 파병 방침을 결정하기 전날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파병방침을 결정해 놓고 수순 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우려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일 NSC회의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뿐이다,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직후에 정부는 4당에 파병결정을 통보하였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난 10월 12일 나종일 외교안보수석의 방미 때 이미 파병의사를 담은 노무현대통령의 친서가 부시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 6. 파병이 경제적 실리를 보장한다?

- 파병이 경제적 실리를 보장한다면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은 왜 파병을 거부하는가?

독일과 프랑스 등이 파병을 거부한 것은 이라크의 석유개발권고 전후 복구 등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미국이 독식하려 할 뿐만 아니라 부담만을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체니부통령과 깊숙이 연결된 벡텔사가 전후복구사업을 독점하였다고 시끄러운데, 과연 한국이 그 잔치에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이라크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함께 싸워 온 영국도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라크 병력주둔 및 경제재건 비용이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미국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의 상당부분을 외국회사에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환상이다.

○ 전후 복구건설 참여-떡고물이나 돌아올까?

1991년의 걸프전 때 한국은 약 5억 달러의 전비를 부담해가며 파병을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전후복구건설공사에서 따낸 공사수주액은 기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파병론자들은 1차 이라크 파병 때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지만, 한국기업이 어떤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제마 부대의 이동외과병원 건설이라는 아주 작은 공사하나를 얻었을 뿐이다.

○ 석유자원 확보에도 도움 안된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독일, 프랑스 등이 분점하고 있던 이라크 석유시장의 미국 독점을 의미한다. 과연 미국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석유를 확보했는가?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에너지자원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다른 중동국가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석유자원의 다변화에 심각한 장애만 초래할 뿐이다.

○ 소탐대실, 중동시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중동지역은 인구 13억의 광대한 시장으로 중국, 중남미와 함께 3중시장으로 불리는 신흥 시장으로 IT산업의 진출 등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공통성으로 이라크와의 유대감이 특별한 지역이다. 이란, 시리아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력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추가 파병으로 미국이 나누어 줄 떡고물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과 수입을 다변화해야 할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전략의 견지에서 보면 명백한 소탐대실이다.

○ 파병은 현찰이고 기대는 환상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2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전비 부담을 약속했다. 1만명을 파견한다고 할 때 서회 제마부대 기준으로 한 해 1조 2천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3년정도 주둔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년간에 걸쳐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 중의 10분의 1이라도 이라크 주민을 위한 구호 자금으로 쓰는 것이 백범 낫다.

○ 근거없는 공포를 선동하지 말라.

사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경제 문외한도 알만하다. 오히려 문제는 경제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선동하는 것이다.

-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스앤피)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어스 에스앤피 전무는 11월3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국가신용등급설명회' 를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앤피의 신용평가위원회는 여러 국적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해 다수결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로 상관없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부시 재선을 위해 이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원화가 움직이는 등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은 추가 파병 여부와 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1차 파병 이후에도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 대미 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왜 파병을 하지 않는가?

## 7. 맹목적인 한미동맹

○ 다자간 안전보장, 주한미군 재배치 유보 과연 추가파병의 대가인가?

노무현대통령은 물론 미국도 정부의 파병결정 전까지만해도 북핵문제나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는 추가 파병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으나 파병결정 이후에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안전보장방안, 주한미군 재배치 유보 등이 파병외교의 성과인양 말하고 있다.

○ 추가파병은 워싱턴의 강경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어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만 초래한다. 미국이 제시한 다자간안전보장 방안은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지난 8월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이 미국의 무성의 탓이라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 이라크 전의 장기화로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정책에 대한 미국내 여론의 악화, 이라크에 발목이 묶여있음으로 해서 군사적 행동 등 강경일변도로 밀어부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시정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일 뿐이다. 정반대로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은 그동안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강경정책을 주도해 온 럽스펠등 부시정권 내 강경세력의 입지를 강화해 줌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다.

○ 주한미군재배치는 추가 파병과는 무관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선제공격전략, 대테러전에 용이한 전력운영을 위해 해외 주둔미군의 규모를 줄이고 경량화하는 신속배치군 중심의 전략을 세운지 오래이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변화

에 따라 주한미군도 보병을 줄이는 대신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신속배치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베트남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지만 주한미군이 감축되었던 것처럼 파병여부와 관계없이 군사전략상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재배치는 진행될 뿐이다.

○ 파병 거부해도 한미 관계 이상 없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거론한다.

대부분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선동행위다. 우리는 이미 1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고, 현재에도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의 어떤 동맹국이 우리만큼 미국의 입장에 오랫동안 일관되게 동참하고 있는가?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력과 굴복은 반미감정의 원인이 되어 한미관계를 해칠 뿐이다.

○ 냉엄한 국제사회, 맹목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익 앞에 당당한 대통령은 꿈인가?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부시정권이 추구하는 일방적인 세계화와 패권정책에 독설을 퍼부으며 당당하게 맞서 왔다. 그 결과는 안으로는 국민적 지지와 함께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 왔고 밖으로는 아세안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의 톨라는 부시대통령이 '이지맨'이라고 부른 노무현대통령보다 더 극진한 예우를 부시로부터 받았다. 무엇 때문인가?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알아서 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냉엄하다.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 맞서 맞장 뜨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국익 앞에 당당한 대통령을 갖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소망은 정녕 꿈인가?

## 8. 부시와 미국은 다르다.

○ 부시정권의 위협한 패권주의, 미국내에서도 비난받고 있다.

지난 10월 3일 미국외교정책협회(FPA)가 미국의 전문 여론조사기관 조그비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미국이 세계 여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9%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월 2일 미 CBS 뉴스와 뉴욕타임스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 결과에 따르면 미국국민의 53%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라고 답했다.

○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와 선제공격론은 미국에서도 비난받고 있는데 왜 한국의 정치권은 침묵하는가?

미국진보센터와 센추리 재단 등 진보적 싱크탱크가 10월 28일 워싱턴 에서 주최한 ‘ 미국의 새로운 안보평화전략’ 세미나에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샌디 버거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루빈 전재무장관 등 빌 클린턴행정부의 전직고위관료들이 대거 참석, 부시행정부의 외교 및 경제정책이 미국과 전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론이 미국 외교정책을 일탈하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버거 전 안보보좌관은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론을 입안한뒤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 으로 몰며 이라크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했다” 고 주장했다. 특히 버거 전 안보보좌 관은 이라크상황과 관련, “이라크가 고전적 의미의 게릴라 전투 의 장이 되고 있으나 부시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 날로 늘어나는 미군 사상자로 위기에 몰린 네오콘은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찍히면서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는 데 앞장섰던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체니 부통령 등 네오콘 세력은 최악의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와함께 부시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프린스턴 서베이리서치(PSR)에 의뢰, 지난 10월 23~24일 유권자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지지도도 9.11 테러사태 직후에 비해 35%포인트나 하락한 5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보유하고 있는 해리 트루만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 평균치인 56%를 밑도는 수치다.

또 지난 10월 9-13일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의 공동여론조사(오차범위±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49%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부시 대통령을 찍겠다는 응답은 44%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13% 포인트 차로 앞서고 8월 조사 때는 8% 포인트 리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됐다.

○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에 몰린 네오콘을 대신해 몰락하기를 원하는가?

부시와 미국은 다르다. 한미동맹이 부시와의 동맹도 아니며 네오콘과의 패권동맹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택해야 한다.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일방주의, 전쟁정책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네오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 9. '비전투병과병'도 있을 수 없다.

- 미국의 요구는 101강습사단의 임무를 대신할 5,000명 이상의 전투부대
- 지금까지 확인된 미국의 파병 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파병부대는 명백히 대규모 전투부

대이며, 한국군의 추가 파병지역으로는 모술 등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돼 있는 셈이다. 미국은 내년 2~3월 중으로 현재 101공중강습사단(1만8,000명)이 맡고 있는 이라크 북부에 대한 치안유지를 '다국적군'에 인계할 계획이다. 미국은 바그다드 등 이라크 중부를 계속 담당할 계획이고, 남부를 맡고 있는 영국도 상당기간 주둔키로 해 변동요인이 없다.

- 미군 101공중강습사단은 이라크에 투입된 미군가운데서도 최정예 특수부대이다. 바그다드 공격때도 최선봉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아파치헬기와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적진 깊숙이 공중투하 되어 선제타격하는 임무를 띠고 있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모델이 된 부대이다.

○ 비전투병 파병도 이라크의 평화에 도움안된다.

-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관한 한미간 실무협약에서 미국에 3,000명 규모의 공병, 의료 부대를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나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사실여부를 떠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추가 파병문제에 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말을 바꾸며 밀실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10. 이라크에서의 미군철수, 민간구호활동이 최선의 대안이다.

○ 미군의 점령정책과 다국적군 파병움직임은 구호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바그다드 사무소에 대한 자살 폭탄테러 사건의 충격으로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라크에서 잇달아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유엔사무소와 국제구호단체까지 이라크를 떠나고, 태국은 '비전투병'의 철수를 논의하는 마당에 '비전투병'의 안전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대규모 비전투병 파병은 필연적으로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베트남 전쟁 때도 소수의 의무부대와 공병부대로 시작된 파병이 연인원 32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더 늦기 전에 네오콘이 벌이는 무모한 전쟁에서 발을 빼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파병도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의 연장을 돕는 반평화적인 행위이다.

-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라면 군대가 아니라 미군 등 점령군의 철수를 전제로 민간 구호단과 지원단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주권을 이양하고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해야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과 원호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다.